

학습 자료

— 대학생들을 위한 저작권 노트 —



8차시. 사적 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1. 사적 복제의 개념

저작권법은 권리자에게 커다란 이익의 손상을 가져오지 않는 한, 일상적인 이용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이용을 보장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허용합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사적 복제’라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자유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도 있으며(법 제36조 제1항), 출처의 명시 의무도 면제됩니다(저작권법 제37조 제1항). 출처명시 의무를 면제한 것은 본조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이 개인적 또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대외적인 이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처명시를 할 필요성이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출처명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2. 사적 복제의 요건

사적 복제의 요건

1. 공표된 저작물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이용
4. 그 이용자가 복제할 것
5. 공중용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가 아닐 것

다음의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개인적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1) 공표된 저작물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돈을 받고 복사해주거나, 복제된 것을 팔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이용

비영리일지라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용하게 된다면 이 역시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례보기

피고인은 노동자들이 노동쟁의를 할 때 투쟁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악곡(樂曲)은 그대로 두고 가사(歌詞)만을 바꾸어 부르는 곡 32곡을 수집한 다음 이를 각 그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작곡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노동과 노래”라는 제목의 책자로 100부 가량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법원의 판단 : 복제의 방법과 그 부수, 배포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연구의 목적으로 위 책자를 출판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용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다.

4) 그 이용자가 복제할 것

사적이용을 하는 이용자 본인이 스스로 복제하여야 합니다. 수족처럼 사용하는 사람이나 보조적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구체적인 복제행위를 하게 하는 것도 이용자 본인의 복제행위라고 보아 허용됩니다.

5) 공중용 복사기기에 의하나 복제가 아닐 것

복사기술의 발전으로 사적 복제에 의한 저작권자의 피해는 예상했던 바를 훨씬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가정 및 그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라고 하는 폐쇄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영세한 복제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된 취지이지, 복사업자에게 의뢰하여 행하는 복제와 같이 제3자를 개입시켜 행하는 복제까지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제업자들은 사적 복제 조항을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직접 복제를 하도록 복제기기를 유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저작권법에서는 주체에 대한 제한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2000년 1월 12일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하여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를 사용한 복제의 경우에는 본조에서 허용하는 복제로부터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3. 디지털환경과 사적 복제 조항의 존속

1) 저작재산권 제한의 근거

책을 베껴 쓴다면 이는 ‘복제’에 해당하지만, 이런 것까지 저작권 침해라고 하게 되면 지식과 문화의 전달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사적 복제 저작권 제한의 대상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소수의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손상할 우려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일일이 규제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얻게 한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자기 방에서 연필로 복사본을 만들고 있는데, 이를 관리자가 알아내서 통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고려 하에 사적인 복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2) 환경의 변화와 사적 복제 대항의 축소 논의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아래의 전제 조건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① 경제적 이익을 손상할 우려가 크지 않았다?

디지털 파일의 복제는 원본과 복사본이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품질이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와 같은 복제기기를 가진 사람이 많아지고, 별다른 기술이나 비용 없이도 복제가 가능해진 것이지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먼 곳에 있는 친구에게도 메신저로 복제된 파일을

보내주는 것도 매우 쉬워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심대하게 손상시킬 우려를 매우 크게 만들었습니다.

②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복제를 규제하는 것이 어렵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복제만 쉽게 해준 것이 아닙니다. 콘텐츠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제나 이용현황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복제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규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사적 복제와 관련하여 특히 저작재산권자들은 사적복제를 허용해주면,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복제기술이 발달된 오늘날 사적복제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가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권리보호와 원활한 이용간의 균형을 해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각 국의 저작권법에서는 사적복제 허용 범위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3) 복제 보상금 제도

복제 보상금 제도(부과금 제도, levy system)는 복사기, 녹음기, 녹화기와 같은 복제기기나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등과 같은 복제용 주변기기를 구입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책이나 음악·영화 등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게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기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사적인 복제와 저작권자간의 이익균형을 맞춰보려는 것입니다.

사적 복제가 매체의 변화, 시대의 변천에 따라 권리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부각되었지만, 그렇다고 사적인 복제를 모두 이용허락을 받고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사적 복제와 관련한 기기 또는 매체 등에 대해 일정한 보상금을 설정하고 징수하여 권리자들에게 분배하거나 문화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를 복제보상금제도라고 하는데, 독일에서 처음 시행(1965)되었고 이후 오스트리아(1980), 헝가리(1981), 콩고(1982), 핀란드(1984), 아이슬란드(1984), 포르투갈(1985), 프랑스(1985), 스페인(1987), 오스트레일리아(1989), 네덜란드(1989), 불가리아(1991), 체코(1991) 등으로 전파되었습니다. 1992년에는 미국과 일본도 디지털 분야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복제기기를 산다고 해서 꼭 복제를 하는 것도 아닌데 보상금을 모두 내도록 하는 것은 구매자의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준조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물가상승을 유발하며 따라서 그 제품에 대한 국제경쟁력도 감소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어떤 복제기기나 매체에 대해 적용하며 얼마를 내도록 할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이익과 사용자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중 유력한 대안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